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 · 조수희 · 황재혁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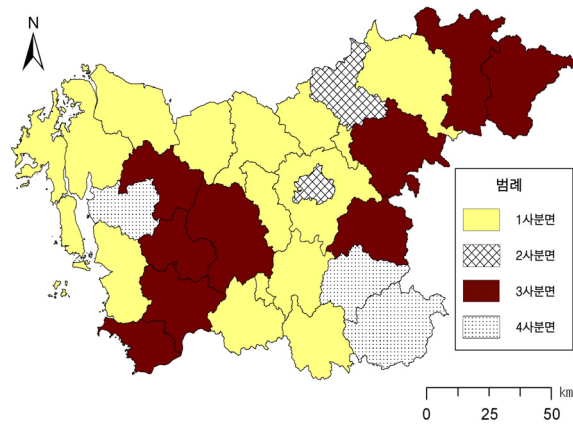
목 차

< 요약 >

- I. 도시재생의 개념과 효과
- II.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정책
- III. 충청권의 도시쇠퇴 실태
- IV. 충남의 대응 전략
- V. 정책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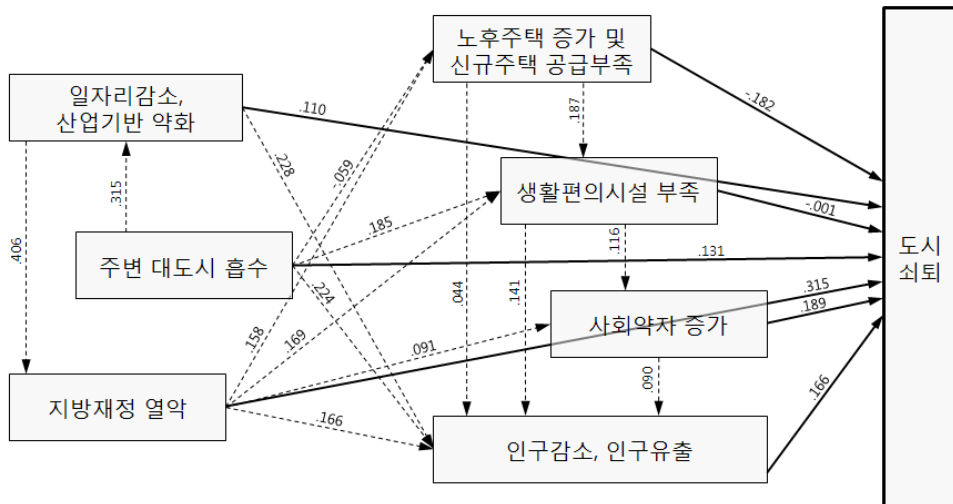
《요 약》

- 최근 도시개발 방식,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변하고 있음. 도시 재생은 기존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함. 즉, 기존의 도시정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물리적 정비를 넘어 사회·문화·경제재생까지 포함한 발전적 개념임
- 정부는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 국토해양부 산하 도시 재생사업단을 조직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역시 2009년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에서 중소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올해 안에 ‘(가칭)도시재생지원법’ 제정을 위해 TF팀을 운영 중에 있음
- 이러한 국가적 움직임에 따라 충남도 도시재생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충남 도시들의 쇠퇴실태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함
- 전문가 의식을 바탕으로 도시쇠퇴실태를 1) ‘도시전체 쇠퇴’와 2) 도시의 일굴인 ‘중심시가지 쇠퇴’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 도시전체 차원에서는 충남의 16개 도시 중 공주시, 보령시 등 11개 도시가 과거(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체·쇠퇴하고 있으며
 - 중심시가지 차원에서는 16개 모든 도시의 중심시가지가 정체 내지 쇠퇴하고 있음
 - 특히, 도시전체 쇠퇴와 중심시가지 쇠퇴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도시들은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등 도시들로 주로 충남의 내륙 도시인 것으로 분석됨



[도시전체와 중심시가지 쇠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도시의 공간적 분포(3사분면의 도시임)]

- 도시쇠퇴의 영향구조분석(Path Analysis) 결과, 도시쇠퇴의 일차적 원인은 일자리감소, 지방재정열악, 주변도시로의 흡수 때문이며, 이것이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 생활편의시설 부족, 사회약자 증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도시가 쇠퇴하는 과정이 확인됨



[도시쇠퇴의 영향구조]

- 충남도와 시·군이 국가적 도시재생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관련 조례 제정 및 관련 부서 설치·운영 등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 실제 광양시, 목포시, 익산시, 전주시 등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조례나 부서를 운영하고 있음
- 충남도는 광역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의 방향성 제시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충남도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야 함
 - 쇠퇴영향구조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쇠퇴의 원인은 해당 도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도시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인접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발굴이 요구됨
 - 현 시점에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등 도시재생 관련 시범사업이나 포괄보조금 제도의 지원 사업을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시·군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 특히, 시·군은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이나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 마스터플랜 수립에 있어서는 국가가 시범사업으로 준비 중인 저탄소 도시재생사업, 수변공간재생사업,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등을 참고로 지역의 특색과 창의성을 살린 사업발굴이 이루어져야 함
 -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재원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있으므로 재정력이 약한 시·군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

I. 도시재생의 개념과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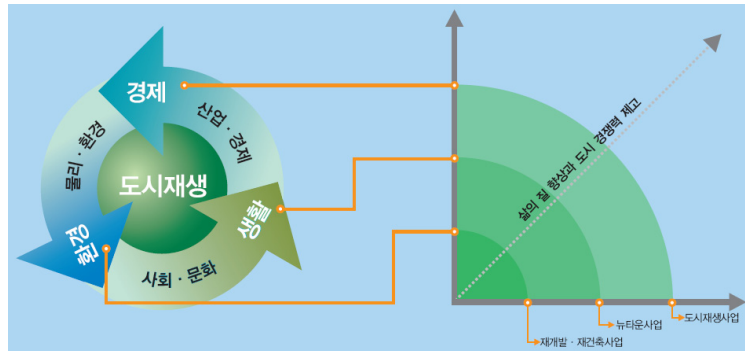
1. 도시재생이란?

-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함



<그림 1> 도시재생의 개념

-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사업, 뉴타운사업 등)를 포함하고 있으며, 물리적 정비를 넘어 환경, 경제, 생활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그림 2> 도시재생의 분야와 목표

2. 도시재생의 효과

- 도시재생사업단에 의하면 도시재생 R&D 연구사업은 1,3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4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그 결과로 175조원에 달하는 도시재생사업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함. 창출된 시장은 각 부문별로 타 산업에 영향을 미쳐 최대 175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최대 87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최대 18,235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계함
- 이는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에 기초하여 산출한 것이며, 도시재생이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됨

<표 1>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택재개발	전체
생산유발효과(억원)	1,345,545	386,921	1,757,188	3,468,654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677,234	194,489	883,650	1,755,373
고용유발효과(명)	15,335	3,576	17,501	36,412

* 총 시장규모의 10%~50%로 도시재생사업이 차지하게 될 때의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351,071억원 ~ 746,932억원
- 부가가치창출효과 176,892억원 ~ 879,042억원
- 고용창출효과 3,671명 ~ 18,235명

** 자료: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

II.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정책

1. 도시재생 R&D 연구

- 참여정부를 시작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추진 중에 있음. 정부는 ‘삶의 질’ 향상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건설교통 R&D 육성을 위해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VC-10)」을 작성하고, ‘도시재생시스템’ 연구개발사업에 향후 10년간 6조5천억 원의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함
-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2006년 국토해양부 산하의 도시재생사업단을 두고,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및 지원체계 개발’, ‘사회통합적 주거공동체 재생기술 개발’, ‘입체·복합공간 개발’, ‘성능·환경복원기술 개발’의 4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본격 연구를 시작함

2. 이명박 정부의 대책

- 이명박 정부 역시 도시재생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재생을 광역경제권 정책, 지방발전 대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적극적 추진을 준비함
 -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2008.12.15,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중소도시재생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즉,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정비, 구도심재생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연결하는 자립적 지역발전 거점 조성 및 대도시 연계 통합개발 및 자족적 발전이 가능한 시·군의 구시가지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또한,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 현안사항(2009.10.29,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제시함. 이를 위해 중소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대단위 개발보다는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살린 점적(點的)개발과 확산효과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시하고 2010년 하반기에 ‘(가칭)도시재생활성화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음

Ⅲ. 충청권의 도시쇠퇴 실태

1. 쇠퇴 실태

1) 도시쇠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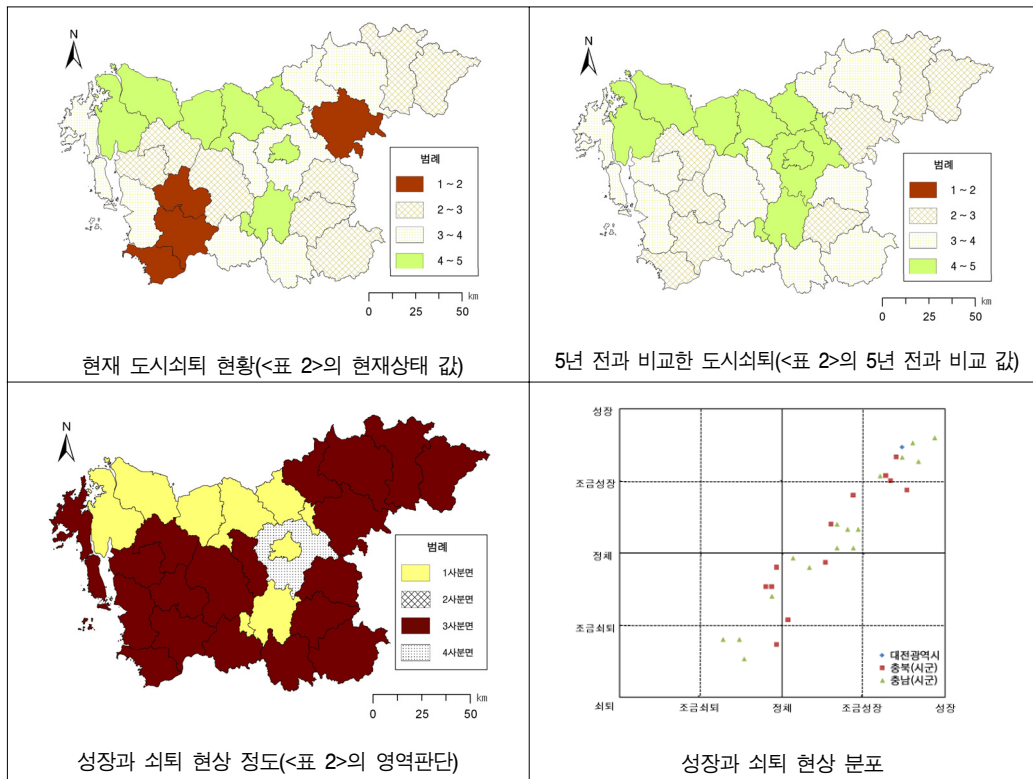
<표 2> 도시쇠퇴 정도

(단위 : 5점 만점)

구 분	도시쇠퇴		성장상 쇠퇴의 정도					5년 후 미래예측
	5년 전과 비교(x)	현재상태(y)	영역	지속적 성장	정체·쇠퇴하지만 과거보다 성장	지속적 정체·쇠퇴	성장하지만 과거보다 정체·쇠퇴	
대전시	4.47 ↗	4.30 ↑	1	○				4.27 ↗
충남	천안시	4.47 ↗	4.33 ↑	1	○			4.40 ↗
	공주시	3.13 -	2.93 ↓	3		○		3.87 -
	보령시	3.80 -	3.33 -	3		○		4.07 ↗
	아산시	4.60 ↗	4.53 ↑	1	○			4.40 ↗
	서산시	4.20 ↗	4.07 ↑	1	○			4.53 ↗
	논산시	3.67 -	3.07 -	3		○		3.73 -
	계룡시	4.67 ↗	4.27 ↑	1	○			4.33 ↗
	금산군	3.67 -	3.40 -	3		○		4.07 ↗
	연기군	3.93 -	3.33 -	3		○		3.80 -
	부여군	2.53 ↘	1.53 ↓	3		○		2.73 ↘
	서천군	2.27 ↘	1.80 ↓	3		○		3.53 -
	청양군	2.47 ↘	1.80 ↓	3		○		3.00 -
	홍성군	3.33 -	2.80 ↓	3		○		4.07 ↗
	예산군	2.87 ↘	2.40 ↓	3		○		4.20 ↗
	태안군	3.87 -	3.07 -	3		○		4.20 ↗
충북	당진군	4.87 ↗	4.60 ↑	1	○			4.80 ↗
	청주시	4.27 ↗	4.07 ↑	1	○			4.47 ↗
	충주시	3.87 -	3.80 -	3		○		4.73 ↗
	제천시	2.80 ↘	2.53 ↓	3		○		3.40 -
	청원군	4.53 ↗	3.87 -	4		○		4.27 ↗
	보은군	3.07 -	2.07 ↓	3		○		4.07 ↗
	옥천군	2.93 ↘	2.80 ↓	3		○		3.33 -
	영동군	3.53 -	2.87 ↓	3		○		3.80 -
	진천군	4.40 ↗	4.33 ↑	1	○			4.80 ↗
	괴산군	2.93 ↘	1.73 ↓	3		○		3.87 -
	음성군	3.60 -	3.40 -	3		○		3.73 -
	단양군	2.87 ↘	2.53 ↓	3		○		3.27 -
	증평군	4.33 ↗	4.00 ↑	1	○			4.47 ↗

* 1점: 쇠퇴, 2점: 조금쇠퇴, 3점: 정체, 4점: 조금성장, 5점: 성장임. 즉, 4점 이하는 정체내지 쇠퇴를 의미함(이하 동일)

- 전문가 의식조사¹⁾ 분석 결과 천안시, 아산시 등 몇몇 도시들을 제외하고 충남의 많은 도시들이 현재 상태는 물론, 과거(5년 전과 비교)부터 지속적으로 정체·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 성장과 쇠퇴 정도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과 경부축(경부고속도로)과 서해안축(서해안고속도로)에 인접한 지역은 성장하고 있지만, 타 지역은 쇠퇴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충남의 경우 내륙 도시들이, 충북의 경우 동북쪽에 위치한 도시들의 쇠퇴 현상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도시쇠퇴 정도(공간적 분포)

1) 전문가 의식조사는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의 시군의 도시계획, 지역경제, 관광,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자치단체 연구원 450명을 대상으로 ‘쇠퇴에 대한 의식과 도시재생 방향 및 전략에 대한 의식’에 관해 2009년 3월 1일부터 25일까지 일대일 면접조사방식으로 이루어짐

2) 중심시가지 쇠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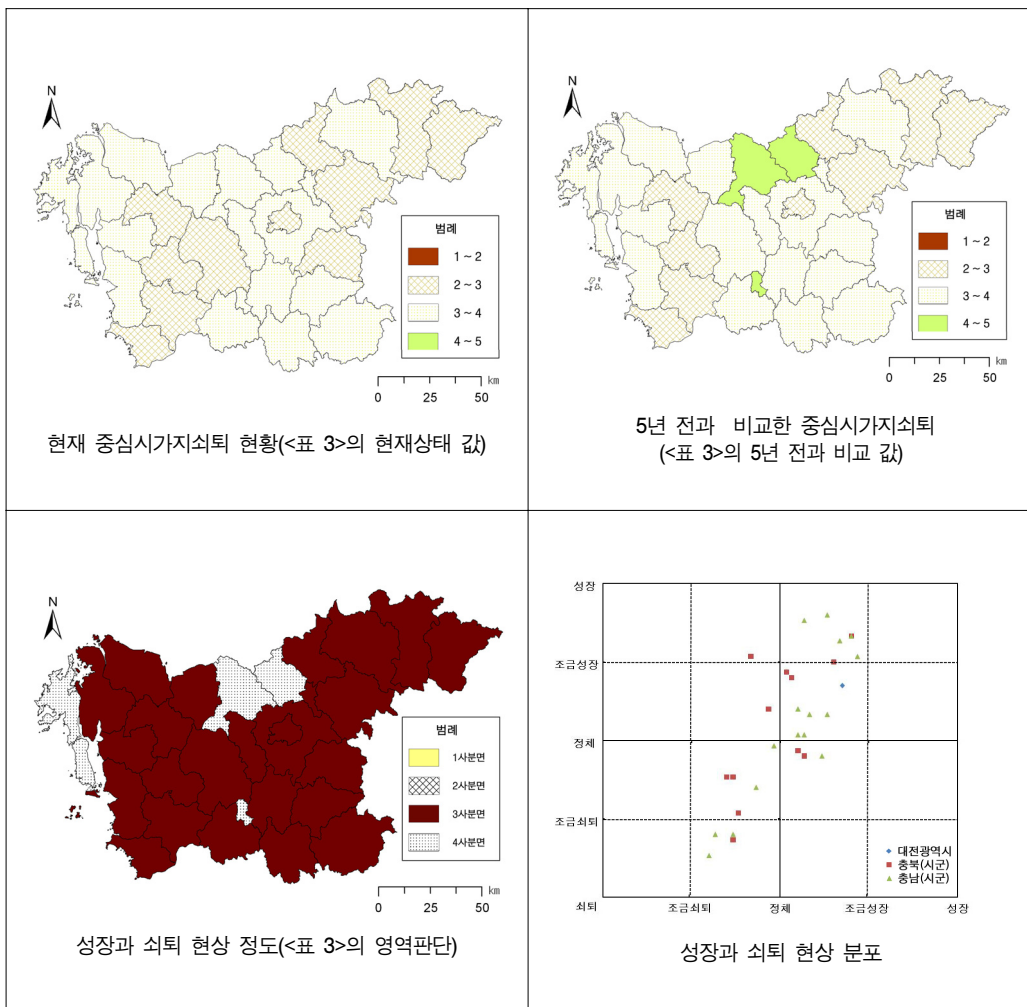
- 중심시가지 쇠퇴현상은 도시쇠퇴현상보다 더욱 뚜렷이 나타남. 천안시, 아산시 등 성장하고 있는 도시에서도 중심시가지는 쇠퇴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음
- 향후 5년 후의 중심시가지 변화 예측에 있어서도 천안시 등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지금처럼 침체 또는 쇠퇴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음

<표 3> 중심시가지 쇠퇴정도

(단위: 5점 만점)

구 분	중심시가지쇠퇴		성장과 쇠퇴의 정도					5년 후 미래예측
	5년 전과 비교(x)	현재상태(y)	영역 판단	지속적 성장	정체·쇠퇴하지 만 과거보다 성장	지속적 정체·쇠퇴	성장하지만 과거보다 정체·쇠퇴	
대전시	3.83 -	3.70 -	3			○		3.90 -
충 남	천안시	4.07 ↗	3.80 -	4		○		4.13 ↗
	공주시	3.07 -	2.93 ↓	3		○		3.53 -
	보령시	3.73 -	3.33 -	3		○		3.73 -
	아산시	3.60 -	3.27 -	3		○		3.53 -
	서산시	3.80 -	3.87 -	3		○		4.20 ↗
	논산시	3.53 -	3.27 -	3		○		3.60 -
	계룡시	4.13 ↗	3.67 -	4		○		3.93 -
	금산군	3.33 -	3.20 -	3		○		3.47 -
	연기군	3.53 -	3.53 -	3		○		3.67 -
	부여군	2.47 ↗	2.20 ↓	3		○		2.60 ↗
	서천군	2.67 ↗	2.27 ↓	3		○		3.73 -
	청양군	2.67 ↗	2.47 ↓	3		○		3.07 -
	홍성군	3.67 -	3.47 -	3		○		3.87 -
	예산군	2.80 ↗	2.73 ↓	3		○		4.00 ↗
	태안군	4.00 ↗	3.20 -	4		○		4.07 ↗
충 북	당진군	3.93 -	3.53 -	3		○		3.87 -
	청주시	2.73 ↗	2.67 ↓	3		○		3.13 -
	충주시	3.20 -	3.13 -	3		○		3.93 -
	제천시	2.67 ↗	2.40 ↓	3		○		3.27 -
	청원군	3.27 -	3.07 -	3		○		3.47 -
	보은군	3.07 -	2.53 ↓	3		○		3.73 -
	옥천군	3.13 -	3.27 -	3		○		3.07 -
	영동군	3.27 -	3.20 -	3		○		3.87 -
	진천군	4.07 ↗	3.80 -	4		○		4.13 ↗
	괴산군	2.87 ↗	2.47 ↓	3		○		3.87 -
	음성군	3.00 -	2.87 ↓	3		○		3.13 -
	단양군	2.87 ↗	2.47 ↓	3		○		3.20 -
	증평군	3.93 -	3.60 -	3		○		3.93 -

- 중심시가지 쇠퇴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현재 모든 도시가 정체 내지 쇠퇴하고 있고, 과거와 비교해서도 침체 내지 쇠퇴하고 있음
- 과거와 현재를 모두 고려하여 가장 쇠퇴현상이 심각한 도시는 대도시인 충남의 내륙도시와 청주시 및 충북의 북동쪽 도시들임



<그림 4> 중심시가지 쇠퇴 정도(공간적 분포)

3) 도시 및 중심시가지 쇠퇴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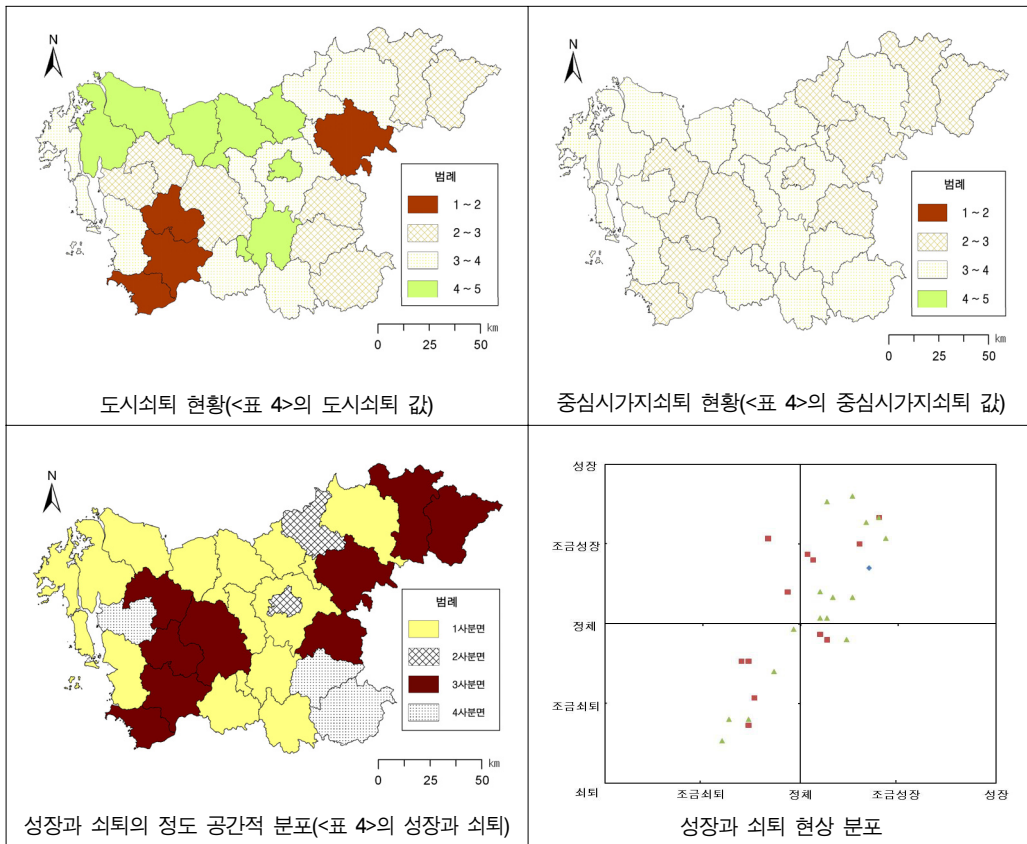
- 도시와 중심시가지 모두 성장하는 도시는 없으며, 도시성장과정에서 중심시가지가 쇠퇴하는 도시로는 대전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등 대도시와 수도권 인접도시이며, 상당수 도시들은 모두 정체·쇠퇴하고 있음

<표 4> 도시 및 중심시가지 쇠퇴

(단위: 5점 만점)

구 분	도시쇠퇴	중심시가지 쇠퇴	성장과 쇠퇴의 정도		
			모두 성장	도시성장/ 중심시가지정체·쇠퇴	모두 정체·쇠퇴
충 남	대전시	4.30 ↑ 3.70 -		○	
	천안시	4.33 ↑ 3.80 -		○	
	공주시	2.93 ↓ 2.93 ↓			○
	보령시	3.33 - 3.33 -			○
	아산시	4.53 ↑ 3.27 -		○	
	서산시	4.07 ↑ 3.87 -		○	
	논산시	3.07 - 3.27 -			○
	계룡시	4.27 ↑ 3.67 -		○	
	금산군	3.40 - 3.20 -			○
	연기군	3.33 - 3.53 -			○
	부여군	1.53 ↓ 2.20 ↓			○
	서천군	1.80 ↓ 2.27 ↓			○
	청양군	1.80 ↓ 2.47 ↓			○
	홍성군	2.80 ↓ 3.47 -			○
	예산군	2.40 ↓ 2.73 ↓			○
	태안군	3.07 - 3.20 -			○
	당진군	4.60 ↑ 3.53 -		○	
	청주시	4.07 ↑ 2.67 ↓		○	
	충주시	3.80 - 3.13 -			○
충 북	제천시	2.53 ↓ 2.40 ↓			○
	청원군	3.87 - 3.07 -			○
	보은군	2.07 ↓ 2.53 ↓			○
	옥천군	2.80 ↓ 3.27 -			○
	영동군	2.87 ↓ 3.20 -			○
	진천군	4.33 ↑ 3.80 -		○	
	괴산군	1.73 ↓ 2.47 ↓			○
	음성군	3.40 - 2.87 ↓			○
	단양군	2.53 ↓ 2.47 ↓			○
	증평군	4.00 ↑ 3.60 -		○	

- 도시가 성장하는 가운데 중심시가지가 쇠퇴하는 경우는 도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도시가 쇠퇴하는 가운데 중심시가지가 쇠퇴하는 경우는 해석을 달리 해야 함. 즉, 도시쇠퇴에 대한 종합적 처방, 도시재생 정책 투입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도시들임
 - 충남의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등이 대표적임
- 도시전체와 중심시가지가 동시에 정체·쇠퇴하고 있는 도시들의 공간적 분포는 충남의 내륙도시들이 많은 반면 경부축과 서해안축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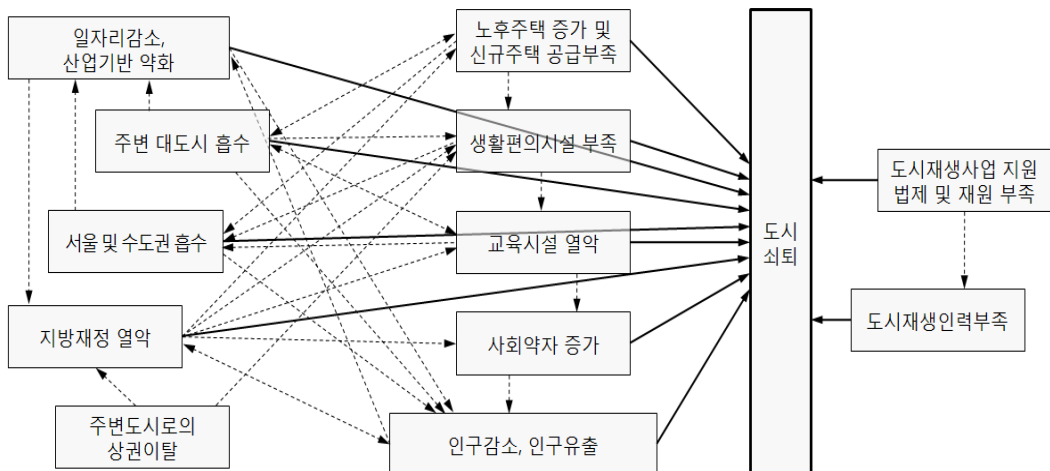


<그림 5> 도시 및 중심시가지 쇠퇴의 공간적 분포

2. 쇠퇴의 영향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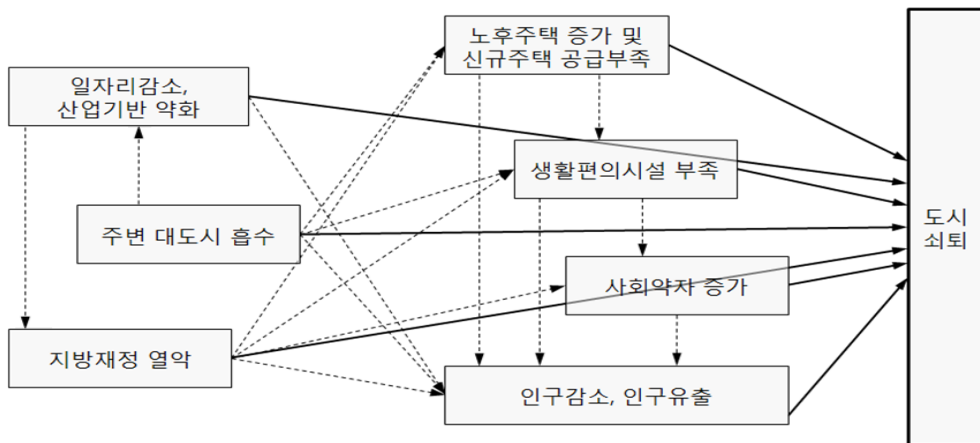
1) 분석모형

- 도시쇠퇴의 영향구조분석을 위한 모형은 도시쇠퇴의 원인과 현상, 이에 따른 결과로 해석함
- 분석을 위한 제안모형은 이론적 바탕을 통해 전문가 의식조사에 의해 수집된 쇠퇴요인을 일자리감소 등 원인적 요인과 노후주택 등의 현상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기본적 경로다이어그램은 <그림 6>과 같음
 - 즉 일자리 및 경제기반 약화와 수도권 및 주변도시의 부정적 영향, 그리고 열악한 지방재정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주택이 노후화되고, 정주환경과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며,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 등 사회약자가 증가하게 됨
 - 이는 다시 인구감소와 인구유출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도시가 쇠퇴하게 된다고 가정한 것임



<그림 6> 도시쇠퇴의 제안모형

- 앞에서 제시한 제안모형을 토대로 하여 영향구조분석을 수행하였음. 그러나 제안모형에서 제시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이 아닌 바, 제안모형을 토대로 한 수정모형의 제시가 요구됨
- 반복적인 영향구조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수정모형을 제시함
 - 즉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낮은 변수와 경로를 제거한 이후 6개의 내부요인과 1개의 외부요인으로 구성된 수정모형을 제시함
 - 한편 영향구조모형의 도출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비록 낮지만, 도시쇠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일부 변수는 모형에 포함함



<그림 7> 도시쇠퇴의 수정모형

2) 분석결과

- 수정모형에서 도출된 경로계수의 유의수준은 몇몇 변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모형의 Chi-square는 59.700, Degrees of freedom는 6, Probability level은 0.000이며, 적합도 지수인 GFI, NFI, CFI값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최종 확정된 수정모형은 처음에 제시된 제안모형에 비해 모형 적합도가 향상되었음(<표 5> 참조)
- 한편, 수정모형의 22개 경로 중에서 유의미한 경로는 총 19개로 전체 경로의 86.4%가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쇠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활편의시설부족을 제외한 6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도시쇠퇴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표 6> 참조)

<표 5> 측정모델 적합도

구분		수용기준	제안모형	수정모형
절대 적합도 지수	$\chi^2(df)$	-	580.7(46)	59.7(6)
	p-value	P>0.05	0.000	0.000
	GFI	0.9이상	0.833	0.968
	RMR	0.05이하	0.171	0.063
	NCP	최소값	534.9	53.700
	RMSEA	1.0이하	0.161	0.141
충분 적합도 지수	AGFI	0.9이상	0.669	0.810
	NFI	0.9이상	0.621	0.919
	CFI	0.9이상	0.833	0.916
	IFI	0.9이상	0.641	0.919
간명 적합도 지수	AIC	-	670.7	119.7
	PGFI	-	0.421	0.161
	PNFI	-	0.367	0.195
경로의 통계적 유의비율		% (유의/전제)	75.0% (24/32)	86.4% (19/22)

- <표 6>에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7개의 변수들이 도시쇠퇴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 그리고 총 영향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음(<표 7> 참조).
- 도시쇠퇴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노후주택의 증가, 고령자 등 사회약자의 증가와 인구감소이며,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주변대도시흡수와 인구감소 및 일자리 부족으로, 여러 변수에 다양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표 6> 수정모형 추정결과

경로		Esti-mate	S.E.	C.R.	P
일자리감소	← 주변대도시흡수	.315	.041	7.037	.000
지방재정 열악	← 일자리감소	.406	.045	9.420	.000
노후주택증가	← 지방재정 열악	.158	.049	3.362	.000
노후주택증가	← 주변대도시흡수	-.059	.047	-1.251	.211
생활편의시설부족	← 지방재정 열악	.169	.044	3.735	.000
생활편의시설부족	← 노후주택증가	.187	.042	4.156	.000
생활편의시설부족	← 주변대도시흡수	.185	.042	4.118	.000
사회약자증가	← 생활편의시설부족	.116	.041	2.716	.007
사회약자증가	← 지방재정 열악	.434	.040	10.190	.000
인구감소	← 일자리감소	.228	.048	5.046	.000
인구감소	← 주변대도시흡수	.224	.042	5.281	.000
인구감소	← 지방재정 열악	.166	.049	3.438	.000
인구감소	← 노후주택증가	.044	.040	1.088	.277
인구감소	← 생활편의시설부족	.141	.044	3.331	.000
인구감소	← 사회약자증가	.090	.049	2.006	.045
도시쇠퇴	← 인구감소	.166	.063	3.344	.000
도시쇠퇴	← 노후주택증가	-.182	.053	-4.235	.000
도시쇠퇴	← 사회약자증가	.189	.065	3.971	.000
도시쇠퇴	← 생활편의시설부족	-.001	.060	-.025	.980
도시쇠퇴	← 일자리감소	.110	.066	2.255	.024
도시쇠퇴	← 지방재정 열악	.091	.066	1.756	.079
도시쇠퇴	← 주변대도시흡수	.131	.057	2.837	.005

-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합친 총 영향은 주변대도시와 지역경제침체 및 일자리감소, 고령자 및 사회약자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어 지방 재정 열악, 노후주택증가 및 신규주택 공급부족, 인구감소 및 유출이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남

<표 7> 도시쇠퇴 영향구조분석의 종합

구 분	직접영향	간접영향	총영향
주변대도시흡수	0.131	0.126	0.257
일자리감소	0.110	0.114	0.225
지방재정 열악	0.091	0.098	0.188
노후주택증가	-0.182	0.016	-0.166
생활편의시설부족	-0.001	0.047	0.046
사회약자증가	0.189	0.015	0.204
인구감소	0.166	0.000	0.166

- 이상에서 살펴본 도시쇠퇴 영향구조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도시쇠퇴의 일차적 원인은 경제, 재정, 주변도시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주거환경 악화, 사회약자 증가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 결과적으로 도시쇠퇴가 진행된다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

IV. 충남의 대응 전략

1.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비

- 정부가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특화된 도시재생을 도모할 계획임에 따라 시범사업에 적극 대비해야 함
- 시범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특색을 살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가칭)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함
 - 특히, 자치단체의 전략적 시범사업 발굴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응한 ‘저탄소 도시재생’,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수변공간 재생’, 지역의 역사문화를 강조한 ‘역사문화 재생’ 기타 ‘일자리와 연계한 도시재생’ 등이 특색 있게 제시되어야 함
- 한편, 2009년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충남발전연구원, 교수,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정부 도시재생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구체화하였음
 - ‘활력 있는 창조적 중소도시재생’을 비전으로 세부 목표와 이를 구체화·현실화할 수 있는 ‘10대 도시재생 전략사업’을 도출함(<표 8> 참고)
 - 충남의 시·군은 지역특성을 살린 실행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해 <표 8>의 10대 전략사업을 예시로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공주, 부여는 역사자원을 활용하는 ‘역사문화디자인을 활용한 창조적 도시재생사업’을, 예산은 신도청이전지역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역신성장거점 연계 재생사업’이, 천안시는 광역거점기능 지원을 위한 ‘지역거점도시 기능회복 재생사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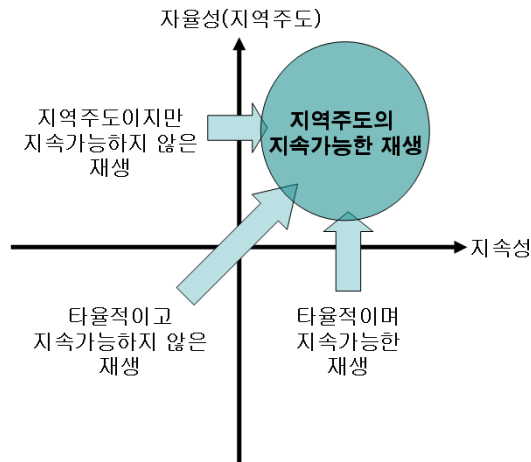
<표 8> 10대 도시재생 전략사업의 주요내용 및 세부사업(예시)

10대 전략사업	목적 및 주요내용	세부사업
저탄소 녹색지향적 도시재생사업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다양한 탄소저감기술을 통한 중소도시 활성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슬로시티 등 녹색지향적 도시재생	-탄소중립도시 조성 재생사업 -에너지자립도시 재생사업 -녹색교통중심도시 재생사업 -슬로시티 조성 재생사업 -탄소제로숲 재생사업 -미기후조절 및 열섬완화 재생사업
지역거점도시 기능회복 재생사업	-광역거점기능 지원을 위한 지역거점기능 재생 -기초생활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거점시설 연계	-교통·물류시설 정비 및 확충 -관련 산업단지 기능재생 -광역거점개발을 활용한 신문화육성사업 -전통산업, 지연산업과 연계한 지역산업 마케팅 사업 -지역관광자원 공동마케팅 사업
지역 신성장거점 연계 재생사업	-지역 신성장거점지역과 인근 기존도시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도모	-지역 간 대중교통활성화 사업 -기반시설연계사업
쇠퇴주거지역 재생사업	-노후한 주거지 환경개선 및 커뮤니티 시설 설치 -사회경제적 지원체제 및 주민참여 기반 주거지 재생	-공공주도 사회통합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지원 -소생활권 단위 커뮤니티시설 확충 및 복합화 -거주민 맞춤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서비스 구축
구도심재생사업	-대도시와 차별성 있는 중소도시 구도심 재생방향 설정	-노후화된 구도심 및 기반시설 정비 -녹색교통체계 활용 미래지향적 도시구조 구축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 지원체제 및 기법개발·적용
산업구조고도화 재생사업	-중소도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낙후한 산업구조 고도화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후 불량 산업단지의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폐산업시설의 지역자원화 전략으로서 생태여가공간 조성 -고부가가치 산업단지로의 산업고도화 사업
기존상권 경쟁력 재생사업	-중소도시의 상권 및 전통시장의 서비스 경쟁력을 부활 -전문점형 전통시장 육성 및 인접 시가지의 공공디자인사업·문화예술과의 연계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전문시장 개발사업 -문화·예술복합형 테마시장 육성 -공공디자인 기반의 5일장, 품물장터·노점물 조성 -유통체계의 과학화와 기업적 시장경영시스템의 도입
역사문화디자인을 활용한 창조적 도시재생사업	-지역고유의 역사문화·디자인을 활용한 창조적 도시재생 -역사문화·디자인의 현대적 재창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적 건축물 활용 사업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디자인 개발 및 상권 활성화 사업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 창조산업 육성 사업
사회자본형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공적영역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과 같은 사회자본 형성 요구	-사회적 기업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지역인재 양성기반 강화사업 -커뮤니티 활성화 시설확충 및 활동 강화 사업
도시재생 패키지사업	-도시재생 관련사업의 연계화를 통한 개발효과 극대화	-정부지원 도시재생사업 연계 패키지사업 -산·학·관·민 연계 패키지사업 -지역 간 네트워크 연계 패키지사업 -선호·비선호 연계 패키지사업 -커뮤니티재생 하드-소프트 연계 패키지사업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외(2009), 「중소도시재생 정책방향과 추진계획」 연구보고서 재정리

2.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은 사업주체(상인과 지역주민), 이용자·소비자(시민·주민), 행정(충남도, 시군)의 공감대와 방향성을 바탕으로 마을 만들기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
 - 특히, 중심시가지 재생은 상업기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기능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수적임
- 결국, 도시재생은 사업의 성격과 특성상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협조할 때 도시재생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효과도 커질 것임



<그림 8>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방향성

- 사업자나 NGO 등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함
 - 특히, 사업자들은 쇠퇴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창조산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주민도 ‘스스로 마을을 만든다’라는 의식이 필요함

- 행정은 주민이나 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각 주체의 역할을 연결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운영하여 각각의 주체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각종 정보의 교류의 장(場)을 만들어 주어야 함

3. 자치단체의 역할

1) 충남도의 역할

- 충남도는 시·군에 비해 보다 광역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의 방향성과 기본적인 대처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도민의 의향 등을 파악하여야 함. 또한 그 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조언을 통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도시재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군과 지역주민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등도 이루어져야하며,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충남도 차원, 인접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여야 함
- 현시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정부가 제시한 24개의 포괄보조 사업군 중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대중교통지원’, ‘문화유산관광지원개발’,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 조성’,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은 도시재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체계화 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함

- 특히, 국토해양부는 「2010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시행기준(2009. 12.)」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을 도시활력재생, 마을활력재생, 기반시설정비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물리적 시설을 종합적·체계적 정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표 9> 포괄보조금의 지원사업과 도시재생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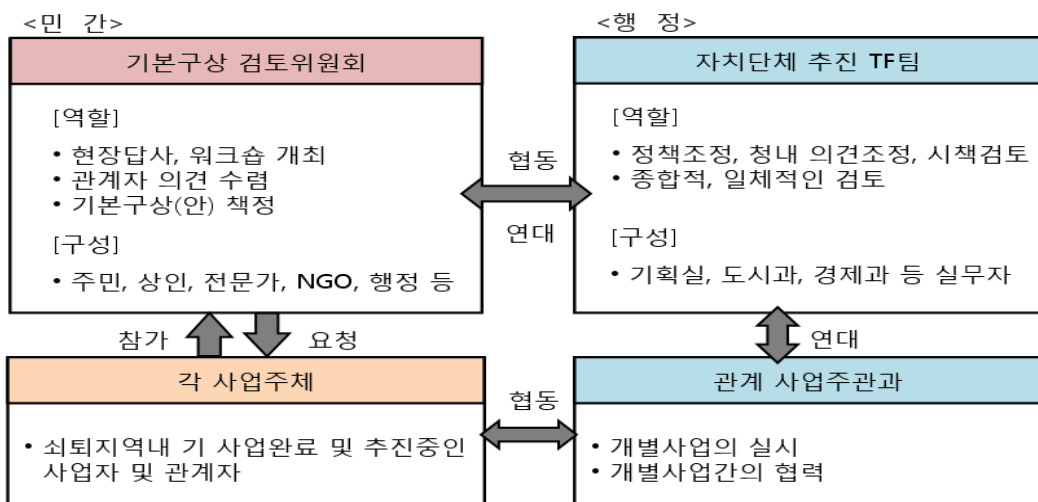
구분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재생과의 관련성		
			높음	보통	낮음
시·도 지·관·청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2. 관광자원개발 3. 체육진흥시설 지원 4.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 ○	○	○
	농림수산식품부	5.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6. 농업기반정비		○	○
	지식경제부	7. 지역특화산업육성지원	○		
	보건복지가족부	8. 청소년시설확충		○	
	환경부	9.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 10.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 ○
	국토해양부	11. 해양 및 수자원 관리 12. 대중교통지원 13. 민자 유치 고속도로 지원 14. 지역거점조성지원	○ ○		○ ○
	문화재청	15. 문화유산관광지원 개발	○		
	농촌진흥청	16.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
	산림청	17. 산림경영자원 육성 18.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 ○
	중소기업청	19.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물류 기반 조성	○		
시·군·구 자·관·청 사업	국토해양부	20. 성장촉진지역개발 2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활력도시재생사업 문화도시재생사업 환경도시재생사업 안전·건강도시재생사업 교육과화도시재생사업 자유창의형 도시재생사업	○	○	
	행정안전부	22. 특수상황지역개발			○
	농림수산부	23. 일반 농산어촌			○
	환경부	24.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2009.6,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 p.158~162 참조 재정리

- 결국 충남도는 시·군의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충남도 차원의 도시재생의 명확한 방향성을 결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이를 위해서 충남도내 관련 부서의 협력체계도 구축되어야 함

2) 시·군의 역할

-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주체인 시·군은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명확히 한 후 주민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주체적·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함
- 특히,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자의 공감대와 방향성 있는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어야 함. 이를 위해 도시 및 쇠퇴지역의 잠재력과 특성분석을 통해 해당 도시 및 재생사업 대상지역(쇠퇴지역)의 명확한 재생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가칭)도시재생 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임



<그림 9> 도시재생 추진에 있어 민간과 자치단체의 역할(예)

- 도시재생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가칭)도시재생 마스터플랜’도 수립해야 함. 실제로 최근, 도시재생에 많은 관심을 갖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표 10>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 현황(2009.10 기준)

도시명	계 획 명	수립연도
서울특별시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2007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	2009
인천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중	-
대전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계획	2006
대구광역시	대구 도심재생 기본구상	2008
광주광역시	광주 도심활성화 종합기본계획	2003
광양시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2007
전주시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2009
공주시	공주고도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계획	2008
청주시	도심활성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용역 중	-

자료 : 서울대학교 외, 2009. 11, 도시재생 R&D연구과제(1-1 세부과제) 4차년도 중간보고, P.17인용

- 또한, 도시재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도시재생지원법’ 제정이전이라도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재원확보와 향후 전개될 예정인 시범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임
- 현재 도시재생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로는 서울시, 인천시 등 대도시와 광양시, 전주시 등 지방도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음
- 이들 자치단체들의 조례 제정 목적은 원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상권 및 기능 활성화에 두고 있으며, 전주시나 익산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특화·특정거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대전시나 목포시처럼 중심시가지 전체를 다루기도 함. 또한, 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표 11> 도시재생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09.10 기준)

구 분	자치조례명	제정일	‘도시재생’ 관련 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2003.3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기획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05.7	도시재생국 도시재생 1,2,3과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07.5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광양시	광양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2009.1	없음
목포시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2006.1	도시개발사업단 원도심사업과, 원도심재개발과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2009.5	
익산시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	2006.1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구도심개발담당
전주시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2003.12	건설교통국 주택과 도심개발담당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지침	2004.10	
	천년 전주 도시재생추진단 운영규정	2009.1	

자료 : 서울대학교 외, 2009. 11, 도시재생 R&D연구과제(1-1 세부과제) 4차년도 중간보고, P.15참조 재정리

- 한편, ‘(가칭)도시재생지원법’ 제정 이전에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²⁾을 자치단체가 종합·체계적으로 시책 및 사업화하여야 하고, 국비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할 것임

<표 12> 정부 부처별 도시재생 관련 사업(예)

관련 부서	사업(예)
국토해양부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중기청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행정안전부	소도읍 육성 사업
지식경제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기 타	기초생활권 포괄보조 지원 사업 등

2) 현재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 200여개의 지원 사업 중 도시재생과 관련된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서 28개의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도시재생 R7D 연구과제(4차년도, 1-3세부) 도시재생관련 법제도 및 지원수단 개발, 중간보고 자료, 2009.11.12, p.10 참조)

V. 정책 건의

- 도시재생은 이제 도시정책의 큰 패러다임임. 이에 정부도 2006년부터 ‘도시재생사업단’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 ‘(가칭)도시재생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음
- 도시재생의 대상이 되는 쇠퇴도시, 쇠퇴지역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눈이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는 충남도 예외가 아님. 실제, 전문가의 식조사결과 충남 16개 시·군 중 11개 도시가 정체·쇠퇴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도시의 얼굴인 중심시가지는 모두 정체·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함
- 쇠퇴원인을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통해 모형화 한 결과, 도시쇠퇴의 일차적 원인은 일자리 감소, 지방재정 열악, 주변도시로의 흡수 때문이며, 이것이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 생활편의시설 부족, 사회약자 증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도시가 쇠퇴하는 과정이 확인됨. 이는 도시재생이 기존의 물리적 도시정비와 달리 진행되어야한다는 것을 말해줌
- 이에, 충남도와 시·군은 도시재생에 대해 보다 능동적·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국가가 관련법 제정을 준비하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지금부터임.
- 이를 위해서는 첫째, 충남도, 시·군은 도시재생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인식하여 도시재생 관련 부서를 만들고,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실제 광양시, 목포시, 익산시, 전주시 등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조례나 부서를 운영하고 있음

- 도시재생은 기존의 물리적 재생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사회·문화, 환경 등이 융합되어 있으며, 추진에 있어서도 주민·상인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 둘째, 국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비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전략적이면서 체계적인 ‘(가칭)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함.
 - 특히, 자치단체의 전략적 시범사업 발굴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응한 ‘저탄소 도시재생’,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수변공간 재생’, 지역의 역사문화를 강조한 ‘역사문화 재생’, 기타 ‘일자리와 연계한 도시재생’ 등이 특색 있게 제시되어야 함
- 셋째, 단기적으로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과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포괄보조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하나의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포괄보조의 성격에 맞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함
- 넷째, 도시재생은 지금까지의 도시개발과는 차원이 다름. 우선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 상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권리관계도 복잡하며, 기존의 정비사업과 달리 단순한 물리적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참여와 초기에는 행정의 리드가 필요함. 이에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칭)도시재생 네트워크’의 구성·운영도 요구됨
-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은 어렵지만 지금부터 대비하여야 함. 왜냐하면 저성장·인구감소시대 도시정책의 답은 도시재생이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도시의 이미지 강화, 정체성 강화, 경쟁력 강화이기 때문임

◆ 참 고 자 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09.10.29), '2단계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http://www.kourc.or.kr/>).

서울대학교 외(2009), 도시재생 R&D연구과제(1-1세부과제) 4차년도 중간보고 발표자료.

서울시립대학교 외(2009), 도시재생 R&D연구과제(1-3세부과제) 4차년도 중간보고 발표자료.

임준홍 외(2009), 「충청권 도시쇠퇴 특성과 재생 방향에 관한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발전위원회(2009),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

충남발전연구원 외(2009), 「중소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 연구」.

임 준 웅, jhim@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책임연구원

Tel. 041-840-1166

조 수 익, ars1025@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선임연구원

Tel. 041-840-1170

왕 개 역, jhhwang@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연구원

Tel. 041-840-1173

본 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 「2009년도 기본과제-충청권 도시쇠퇴 특성과 재생방향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요약·재정리한 것으로,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도 제고 및 확산에 기여코자 함

충남리포트 리스트

구분	보고서 제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 · 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 · 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 · 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 · 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종문 · 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욱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 · 한상욱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 · 한상욱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 · 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이상준·권영현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 · 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 · 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 · 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 · 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 · 김양중	2009.12.31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